

『인권연구』 8(1): 39-78.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8(1): 39-77.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5.8.1.39>

[일반논문]

한국의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

: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극우 유튜브 채널과 퇴행적 인권 담론*

김 중 우**

한글초록

이 글은 극우 포퓰리즘에 의한 인권 담론 전유 현상을 한국의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사이의 기간에 극우 유튜브 채널이 ‘인권’을 사용하는 맥락과 레토릭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11개의 극우 채널 약 4천 개 영상의 공통 출현 어휘 분석과 함께 라클라우와 무페의 담론 이론을 적용하여 ‘인권’과 ‘차별’이 출현한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전된 피해자성’ 레토릭을 통해 자신들을 피해자로, 소수자를 가해자로 재위치시키는 ‘선택적 인권’ 전략이 확인되었다. 둘째, ‘적대성의 정치’와 ‘등가사슬’을 통해 북한, 중국, 성소수자, 무슬림 등 여러 이질적 집단을 하나의 위협적 타자로 결합하고 있었다. 셋째,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제도적 불신’의 언어를 통해 인권 관련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극우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인권의 ‘퇴행적 서사’는 보편적 인권을 사회적 배제의 도구로 전용하고, 민주적 차이를 적대관계로 재구성함으로써 다원주의적 공론장을 위협하는 이념적 장치로 기능할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가

* 이 글은 2025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주최: 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부산대학교 SSK 느린재난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연구입니다. 또한, 이 연구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원고를 위하여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교육연구단 연구교수(copy333@daum.net)

직면한 인권 담론의 위기와 민주적 공론장 재건의 시급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극우 포퓰리즘, 인권, 유튜브, 12.3 비상계엄, 퇴행적 인권 담론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
- III. 이론적 배경: 뉴미디어와 적대성의 정치, 빈 기표
- IV. 연구 자료와 방법
- V. 극우 담화와 인권, 차별: 인권과 차별의 공기어 분석
- VI.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의 재구성
- VII.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말

이미 인권의 확장이 “국제적 법의 지배와 기준이행만으로는 역부족인(조효제, 2018: 64)” 단계로 진입한 상황에서 극우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인가. 이 글은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되는 극우 담론 내에서 ‘인권’, ‘차별’이라는 기표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활용되는지 분석한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권’ 개념이 극우 담론에서 전유되어 특정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현상이 극우 유튜브 내에서 형성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인권은 극우 포퓰리즘 등 극단적 정치 세력의 부상 과정에서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 여성혐오 등 반인권적인 의제”에 의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Alston, 2017: 1). 특히 포퓰리즘(populism)은 반인권의 주요 언어, 이념으로 사용되고 있다(Roth, 2017). 2000년대 이후 극우 정당의 주류화가 진행된 유럽 극우 정당들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의 주요

개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혐오 발언을 정당화하거나 다수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수자 권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인권 담론을 왜곡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핀란드, 독일, 프랑스의 극우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권의 용어를 전략적으로 전유”하는 현상(Tuori and Karjalainen, 2024: 14)을 통해 우익 포퓰리즘이 인권이 뿌리내리고 있는 언어의 기틀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특정 지역의 특수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0년대 이후 유럽 및 미국 등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공통으로 포착되는 현상이며(주미영, 2021), 민주주의 제도적 성숙성이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는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도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세를 확장하고 있다(오창룡, 2023; 서현수, 2024).

특히 혐오가 하나의 정서를 넘어 이데올로기화한 한국 사회에서(홍성수, 2019) 극우 세력이 인권이라는 상징을 사용하는 양상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포퓰리즘 세력에서 대안적 언론으로 주목하고 있는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권 개념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전략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 담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이 글은 한국의 극우 포퓰리즘 내에서 주로 등장하는 퇴행적 인권적인 의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II.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

1. 극우와 포퓰리즘 개념의 구분과 결합

극우 포퓰리즘은 ‘극우’와 ‘포퓰리즘’이라는 다른 두 개념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극우(far-right) 또는 급진우익(radical right)은 본질적으로 기존 민주주의 체제와 그 가치에 대한

의문에 토대를 두고 있다. 먼저, 극우는 다섯 가지 핵심 특징을 갖는다(Mudde and Kaltwasser, 2017). 첫째,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관용과 타협에도 부정적이다. 둘째, 강력한 지도자와 위계질서를 선호하는 권위주의적 경향을 나타내며, 전통적 권위와 질서를 이상화한다. 셋째, 이민자와 난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보이며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인종주의적 함의를 동반하기도 한다. 넷째, 문화적 다양성에 반대하고 단일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반다원주의 성향을 지향한다. 다섯째, 순수한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외부 집단을 배제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표방하여, 토착민과 외래자 간의 위계적 구분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극우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유럽 및 미국의 정당 정치 내에서는 이미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National Rally)이 이민자 배척과 EU 탈퇴를 주장하거나, 독일의 대안당(AfD)이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반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대안 우파(Alt-right) 운동 역시 백인 우월주의와 반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보여준다.

반면 포퓰리즘은 그 자체로 이념적 내용이 없는 얇은 이데올로기로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 결합한다는 점에서 “절합의 논리(logic of articulation)”로 규정되기도 한다(Laclau, 2005: 33).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이 명료한 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정치적 수행의 방식이자 담론적 전략이 뒤섞인 정치적 소통의 형식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이념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나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와 같은 좌파 포퓰리즘부터 이탈리아의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과 같은 우파 포퓰리즘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퓰리즘 역시 다섯 가지 핵심 특징으로 구성된다(정병기, 2020; Mudde, 2004; 2007). 첫째, ‘순수한 대중’과 ‘부패한 엘리트’를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통해 현실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단순화한다. 둘째, 내집단(우리)과 외집단(그들)을 구분하는 차이의

논리를 작동시키며, 정치적 정체성을 적대관계를 통해 구성한다. 셋째, 기존 정치 엘리트, 지식인,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강조하는 반엘리트주의를 표방하며, 기성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한다. 넷째, 지도자가 ‘침묵하는 다수’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중개 없는 직접적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를 이상화한다. 다섯째, 정치적 경쟁을 도덕적 대립으로 재구성하여 자신들의 입장에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하며, 정치적 반대자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규정한다.

따라서 극우와 포퓰리즘의 결합은 극우적 이데올로기와 포퓰리즘의 정치적 소통 양상의 결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두 개념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배제와 적대적 경계 형성을 핵심 가치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친화성을 지닌다. 실제로, 극우와 포퓰리즘의 결합은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합은 각각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전략적 성격을 갖는다. 극우는 포퓰리즘을 통해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포퓰리즘은 극우를 통해 구체적 이념적 내용을 획득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극우 포퓰리즘이 단순한 이념적 결합을 넘어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잠식하는 체계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표 1> 극우 이데올로기와 포퓰리즘 개념의 비교

	극우	포퓰리즘
학술적 정의	토착주의와 권위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순수한 민중 대 부패한 엘리트의 이분법적 대립구조
이데올로기적 특성	기존 우의 이념의 극단화된 양상	다양한 이념과 절합하는 ‘논리’
핵심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배타성, 문화적 순수성, 전통 질서	이분법적 세계관, 민중주권, 반엘리트주의, 직접민주주의
사회, 정치적 지향	권위주의적 통치, 강력한 국가 정치적 기반을 위해 포퓰리즘 활용	반엘리트주의와 민중 의지의 직접적 구현→대의민주주의 제도 불신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단순한 용어의 혼재가 아니라, 극우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권위주의가 포퓰리즘의 반엘리트주의와 민중 의지 강조와 체계적으로 결합된 정치적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결합은 민주주의의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그 실질적 내용을 공동화시키는 ‘민주주의의 민주적 파괴’라는 역설적 현상을 낳으며, 인권과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2.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

극우와 포퓰리즘의 결합은 인권과 관련 쟁점에서도 점차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 들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과 함께 이민자, 소수자 그리고 이와 연관된 기존 시민사회 및 NGOs 등에 대한 공격과 같은 백래시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Nayyeri, 2025) 기존 인권 체계와 제도에 실질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Neuman, 2018). 주목할 만한 것은 우익 행위자들의 법적 동원 전략인데, 이들은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법적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을 취한다(Blokker, 2024: 414).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은 민족주의, 전통적 젠더 담론, 다원주의에 대한 공격을 통해 보편적 인권 개념에 체계적으로 도전하고 있다(Kenny, 2020; Krpec and Wise, 2023). 폴란드 ‘법과 정의당’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이러한 정권들이 소수자 보호보다 국가 정체성과 다수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Kocemba and Stambulski, 2023). 이 과정에서 기존 지역적 시민사회 활동을 주도하던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취약해지는 양상도 드러나는데, 김성철(Kim, 2022)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극우 포퓰리스트 지방정부들이 비판적 단체들을 배제하고 우호적인 단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약화시키는 양상을 분석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극우 포퓰리즘 담론의 확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인권 담론의 왜곡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과 단체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토착주의, 인종주의, 권위주의적 담론을 전파하며 배타적 정치를 정상화하고 극우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제적 연대를 구축한다(O'Callaghan et al., 2012).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 개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혐오 발언을 정당화하거나 다수 집단의 권리를 정당한 권리로 주장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전의령, 2017; Tuori and Karjalainen, 2024).

이러한 극우 포퓰리즘에 대항하여 인권적 가치와 제도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인권 담론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제안한다. 해밀튼(Hamilton, 2023: 697)은 극우 포퓰리즘에 대항한 “성공적인 인권 옹호를 수행하기 위해 정서를 촉발시키는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제안은 대중적 호소력을 갖춘 새로운 인권 중심의 정서적 레토릭의 구축이 전문가 중심의 인권 담론이 지니고 있던 “희망 없는 법률주의(hopeless legalism)”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임을 주장하는 논의와 이어진다(Dancy and Fariss, 2017: 1).

3. 한국 맥락에서의 극우 포퓰리즘 연구의 현황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에서 극우 포퓰리즘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에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극우 포퓰리즘을 다룬 국내 연구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가시화된 극우 포퓰리즘의 돌풍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황인정(2024)의 연구는 극우의 핵심을 보편주의에 대한 거부로 규정하며, 사회 내에서 다른 집단 간에는 평등보다 질서가 존재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로 분석한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는 반다문화 담론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베’와 같은 온

라인 커뮤니티가 생산하는 반다문화 담론이 신자유주의적 배제의 논리에 기초함을 지적하기도 한다(전의령, 2017)

하지만 국내의 극우 포퓰리즘 연구는 대부분 극우 이념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들 연구는 주로 극우 개신교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서 극우 이념이 대중적으로 확장한 계기가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국면의 ‘태극기 집회’라는 집합행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왕배, 2017). 한국적 극우의 독특한 특징으로 극우 개신교와의 결합을 다룬 연구들은 20세기 초 평안도와 황해도 의 개신교 운동이 하나의 신앙적, 사회적 주체로 부상하여 근본주의적 장로교 신앙이 반공주의와 결합하며 극우적 대중정치의 장소에서 메시아적 담론을 통해 대중의 절망과 좌절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와 공격으로 전환되었던 과정을 지적하기도 한다(김진호, 2016). 2000년대 이후를 다룬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시작된 개신교 우파의 정치적 행동주의가 2016년 이후 ‘태극기 부대’의 핵심 세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미국 그리스도교 우파와의 밀도 높은 상호작용이 한국의 극우정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 반공-반북-친미라는 3대 가치와 성소수자, 무슬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혐오가 결합되는 양상을 분석한다(강인철, 2020).

이 글은 기존 연구가 주로 서구 사회의 제도정치 차원에서 분석하거나, 극우 이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에 비하여,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의 관계를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공간으로 확장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12.3 비상계엄이라는 한국적 맥락에서 나타난 극우 담론의 특수성을 라클라우와 무페의 담론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극우 포퓰리즘이 인권을 ‘빈 기표’로 전용하는 구체적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III. 이론적 배경: 뉴미디어와 적대성의 정치, 빈 기표

최근 뉴미디어 환경, 특히 유튜브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콘텐츠 큐레이션이 유사성에 기반한 연결을 강화하고 정보 전파를 촉진한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Kaiser and Rauchfleisch, 2020). 특히 포퓰리즘 정당은 전통적 정당 조직이나 자원 동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취약하기에 전통적 미디어에 비해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Kenny, 2020). 뉴미디어를 다룬 연구들은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의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이 ‘반향실 효과’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기존 신념을 고착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Brown et al., 2022; Sun, Ma, and Huo, 2022). 이러한 연구들은 이용자 편의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뉴미디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개인화 메커니즘을 통해 특정 이념적 성향의 이용자들에게 선택적으로 노출시켜 자신들이 선호하는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뉴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극우적 인권 담론의 재구성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출발점은 선택적 노출 현상의 심화이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념 체계와 부합하는 콘텐츠를 선호하면, 알고리즘은 이러한 패턴을 학습하여 유사한 가치나 이념을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반향실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하듯 특정한 이념적 해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집단 극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는(Sunstein, 2017). 즉, 동질적 견해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이 증가하면 극단적 입장은 점차 일반화되며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고,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은 강화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반향실 효과 등 집단 극화 현상을 인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라클라우와 무페의 사회운동에 관한 담론이론을 차용한

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인권 담론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분석하는데, 라클라우와 무페의 담론이론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우선 라클라우와 무페(Laclau and Mouffe, 2001)는 사회적 실재가 본질적으로 담론적 구성물이며, 모든 정체성과 의미는 담론적 실천을 통해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권 개념 역시 고정된 본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담론적 투쟁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의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여기에서는 이들 담론이론의 세 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정치적 적대성(political antagonism)은 내집단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집단 외부의 적대적인 타자를 의미한다. 일례로, 기존의 극우 포퓰리즘을 다룬 연구에서 다루어지듯, 극우 담론에서 정당성 있는 우리는 ‘순수한 대중’으로 다루어지며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할 타자, 외집단은 ‘부패한 엘리트’ 혹은 ‘위험한 외국인’ 등의 낙인이 부여된다(Mudde and Kaltwasser, 2017). 즉, 우리와 타자는 적대적 경계를 통해 구분되며 이러한 적대성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정체성 형성의 필수적 조건으로 작동한다(Laclau and Mouffe, 2001).

이와 함께, 등가의 사슬(chain of equivalence)은 서로 다른 가치, 상징들이 공통의 적대를 매개로 연결되는 접합 과정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극우 담론에서 인권은 보편주의,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성소수자 권리 등과 연계되어 하나의 부정적 연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불만들이 인권에 대한 퇴행적 서사와 같은 프레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빈 기표(empty signifier)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예를 들어 ‘인권’에 부여된 고유한 의미가 있더라도, ‘인권’이라는 기호나 발화하게 되었을 때, 마치 비어있는 공간에 누구라도 들어 올 수 있듯이 인권이라는 비어있는 기표 안으로 다양한 정치적 요구들을 수용하는 결절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라클라우가 언급한 유동적 기표(floating signifier)의 특성, 즉 서로 다른 정치적 프로젝트들이 경합하는 의미화의 장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는 개념

이다.

이러한 이론적 프레임은 극우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인권 개념을 자신들의 헤게모니에 접합시키고, 기존의 보편적 인권 담론과 다른 인권의 서사를 형성하는지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여기서 나아가 뉴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기술적 특성이 이러한 담론 구성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현대 극우 포퓰리즘의 인권 담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선택적 노출과 집단 극화가 라클라우와 무페가 이론화한 적대성의 구성과 ‘빈 기표’, ‘등가사슬’의 형성 과정을 유튜브라는 뉴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연구 자료와 방법

본 연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 탄핵 선고 사이의 기간 중 주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담론 변화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해당 기간에 집중하여 데이터의 시의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정치적 위기나 전환기는 사회 담론의 변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김왕배, 2017).

분석 대상 콘텐츠는 해당 채널 영상 중 시기적 관련성을 갖는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영상으로 한정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회수와 같은 인기도 지표가 콘텐츠의 확산 및 영향력을 반영한다는 선행 연구들(Aggrawal et al., 2018; Brodersen, Scellato and Watterhofer, 2012)에 기반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채널 선정 기준은 탄핵과 계엄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구독자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갖는 채널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구독자 수 10만 명 이

상인 채널 중 유튜브 통계 분석 플랫폼인 ‘플레이보드’에서 정치 항목으로 분류된 채널 상위 200개를 초기 탐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채널 가운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의 슈퍼챗(superchat)¹⁾ 규모와 구독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출현하는 채널을 2차로 선정하였다. 다만, 일부 주요 채널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생성되어 구독자 및 슈퍼챗 데이터 축적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널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주요하게 다루어진 채널들(예: 전한길 뉴스, 전광훈TV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1개 채널²⁾ 4,119개의 영상을 수집하였다. 분석 자료는 선정된 유튜브 영상의 자막 텍스트를 전처리하고 교정하는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영상의 텍스트 자막 및 영상의 제목, 조회수, 업로드 날짜 정보는 YouTube Data API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코퍼스 분석 방법의 하나인 공기어(co-occurring words, collocation) 분석을 활용하여 인권과 함께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어휘들이 인권의 맥락적 의미와 의미적 근접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분석한다. 공기어는 “특정 단어와 그 주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주 함께 나타나는 어휘 항목(lexical item)

-
- 1)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나 프리미어 공개 중에 시청자가 스트리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기능이다. 보낸 금액에 따라 댓글이 강조되어 스트리머에게 더 잘 보일 수 있으며, 스트리머는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수집한 슈퍼챗 데이터는 유튜브 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플레이보드’에서 추정된 데이터임을 밝힌다.
 - 2)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수집한 채널의 월평균 구독자와 채널별 슈퍼챗 총액(누적금액)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고성국TV(124만명/약5.3억원), 공병호TV(73.6만/약7,900만원), 김채환의 시사이다(69.5만/비공개), 배승희 변호사(158만/약1.6억원), 성장경TV(114만/약2,100만원), 신의한수(162만/ 약 10.8억), 이봉규TV(96.6만/약1.2억원), 전광훈TV(24.2만/비공개), 전한길뉴스(21.6만/비공개), 펜앤마이크TV(172만명/약6.3억원). 출처: PLAYBOARD (<https://playboard.co/>).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단어는 그 주변의 단어들에 의해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언어학자 퍼스(J. Firth)의 관점에 기반한다(Bartsch and Evert, 2014: 48-49). 공기어 분석은 언어학 분야를 중심으로 의미 변화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프레임 분석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최유숙, 2017; 이재연, 한남기, 2017; 이해미, 2025). 이 글에서는 공기어 분석을 통해 ‘인권’이 실제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다른 개념, 사건, 행위 등과 연결되어 사용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인권’의 추상적인 개념이 극우 포퓰리즘 담화 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이해되는지를 밝힐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의 관계성을 추정하기 위한 공기어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먼저 ‘인권’, ‘차별’과 같은 단어³⁾를 중심으로 좌우 각 5단어씩, 총 11단어 범위(window)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범위 크기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적인 어휘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주변 어휘까지 포괄하여 맥락적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함이다(Church and Hanks, 1990: 23).

설정된 범위 크기 내에서 ‘인권’과 함께 출현하는 모든 어휘에 대해 다음의 통계적 지표를 계산하여 각 어휘와의 공기 강도를 측정한다. 이러한 통계 지표들은 두 단어가 우연히 함께 나타날 확률(기대 빈도)과 실제 코퍼스에서 함께 나타난 횟수(관찰 빈도)를 비교하여 두 단어 간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연관성의 강도를 산출한다. 이때, 기대 빈도(E)는 두 단어 ‘인권’과 특정 명사 ‘ w ’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연히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빈도

3) ‘인권’과 함께 ‘차별’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비차별원칙과 평등이 등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기존의 논의(송지우, 2022; Alston, 2015)에서 기인한다. 인권에서 비차별은 핵심 원칙으로, 인권과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인 다원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만, 평등은 차별과 달리 그 개념적 내용이 모호한 측면(지위의 평등과 물질 평등의 차이 등)이 존재하기에 이번 분석에서는 인권 관련 주요 키워드로 ‘인권’과 ‘차별’을 선정하였다.

를 의미한다. 여기서 ‘빈도(인권)’는 코퍼스 전체에서 ‘인권’ 단어가 출현한 총횟수, ‘빈도(w)’는 코퍼스 전체에서 특정 어휘 ‘w’가 출현한 총횟수, 그리고 ‘코퍼스 전체 단어 수’는 분석에 사용된 전체 텍스트 코퍼스의 단어 총수를 나타낸다.

이 글에서는 기대 빈도 산출을 바탕으로 다음의 통계적 지표들을 계산한다. 먼저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는 두 사건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추정하는 지표로, 자연어 처리에서 단어 사이의 연관성 측정에 많이 사용된다(Damani, 2013). 이 연구에서는 특정 단어 전후에서 함께 등장하는 두 단어(예를 들어, ‘인권’과 어떤 단어 ‘w’)가 우연히 함께 등장할 확률인 $(P(\text{인권}) \times P(w))$ 에 비해 실제 코퍼스에서 함께 등장할 확률인 $(P(\text{인권}, w))$ 이 얼마나 더 높은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였다. PMI 값이 클수록 무작위로 함께 등장할 가능성이 작아 두 단어의 관련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낮은 빈도의 어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 ‘차별’과 특정 명사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와 함께, 공기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을 추정하기 위한 t-점수⁴⁾, 공기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로그 우도비⁵⁾를 함께 측정하였다.

V. 극우 담화와 인권, 차별: 인권과 차별의 공기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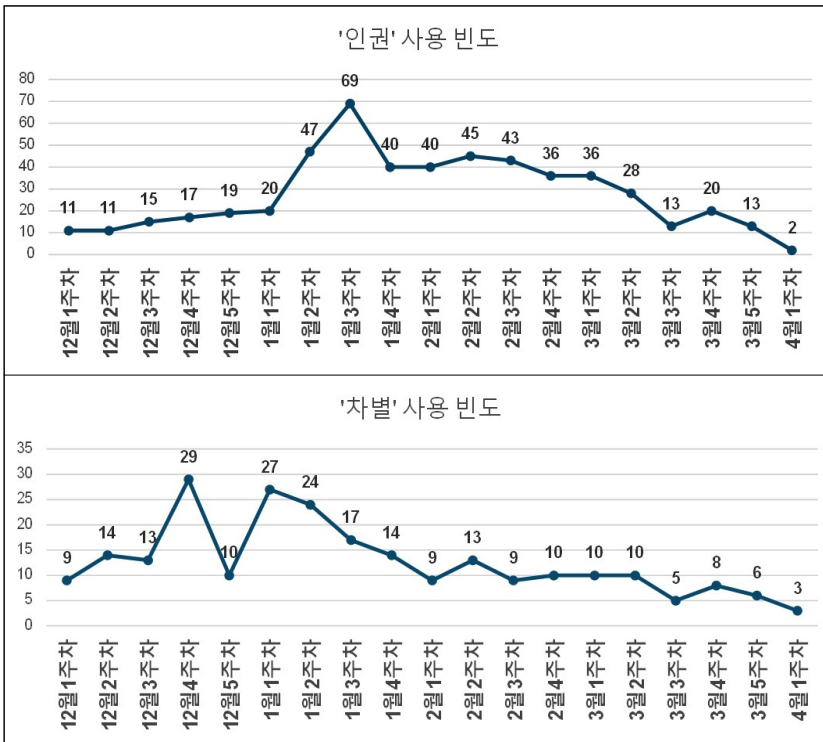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11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인권’, ‘차별’이 사용된 빈도 추이를 통해 인권과 주요 사건의 연관성을 우

4) t-점수(t-score)는 두 단어의 공기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관찰된 빈도와 기대 빈도 간의 차이를 표준 오차로 나누어 계산한다. t-score 값이 클수록 해당 공기 관계가 우연이 아닌 유의미한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

5) 로그 우도비(LL, Log-likelihood ratio)는 대용량 코퍼스에서 두 단어의 공기 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t-score나 PMI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 살펴본다. 아래 <그림 1>에서 나타나듯, 극우 유튜브에서 나타난 ‘인권’, ‘차별’ 언급 빈도는 정치적 상황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극우 유튜브 콘텐츠 내의 ‘인권’, ‘차별’의 사용 빈도(주간)



12월 초(주당 11회)에서 시작된 언급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2월 말에는 19회로 소폭 상승했다. 이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 3일과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던 12월 14일 사건 이후의 시기이다. 2025년 1월 초(주당 20회)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며 ‘인권’ 언급은 급격하게 증가(47회)했고, 1월 20일을 포함한 주간에는 최고점(주당 69회)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1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와 연관된 일련의 사건(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등)을 극우 유튜버들이 시민의 ‘저항권’ 행사로 프레임화하며 ‘인권’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결과로 보인다.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주당 40-45회). 이 시기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1월 26일),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극우 진영에서는 사법 절차를 정치적 박해로 재구성하는 담론과 선거 부정과 외국 개입에 관한 음모론을 권리 침해와 연계하며 ‘인권’이 자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3월부터는 주당 언급 빈도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36→28→13회),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에는 급격히 감소(주당 2회)했다. 탄핵 결정이 확정되고 탄핵 관련 쟁점이 소강 국면으로 진입하며 극우 진영 내에서 인권을 언급하는 빈도 역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인권과 연관된 개념들(인권, 차별)은 극우 담론 내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되고 있을까. <표 1>에서 나타나듯, ‘인권’과 강한 공기관계를 보이는 단어는 ‘탄압’, ‘연구’, ‘방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이 극우 담론 내에서 억압받는 대상으로서 혹은 보호와 방어의 대상으로 자주 호출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공기어들은 의미상 크게 행위자, 이념/가치, 법/제도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그룹 내에서도 PMI 값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1> 극우 유튜브 콘텐츠 내 ‘인권’의 공기어 분석 결과(PMI 점수순)

단어	범주	PMI	t점수	LL	단어	범주	PMI	t점수	LL
탄압	이념/가치	98.6	7.7	598.5	헌법재판소	행위자	33.6	8.9	299.2
연구	행위자	97.6	12.5	1385.3	대한민국	행위자	33.2	11.4	456.4
방어	법/제도	97.5	8.3	584.4	대통령	행위자	33.2	17.0	1036.9
가치	이념/가치	86.0	6.1	244.0	재단	법/제도	28.5	5.6	320.1
사회	이념/가치	85.8	6.1	230.7	여성	행위자	26.4	6.4	293.1
우리	행위자	83.5	14.6	806.9	원칙	이념/가치	25.8	6.4	256.4

단어	범주	PMI	t점수	LL	단어	범주	PMI	t점수	LL
안건	법/제도	78.4	5.2	265.7	출신	행위자	25.7	7.1	309.4
국제	행위자	77.5	10.3	919.5	문제	법/제도	24.6	11.0	608.0
수사	법/제도	73.8	8.2	267.7	자유	이념/가치	24.2	9.1	372.5
인권위	행위자	69.9	6.0	434.8	중국	행위자	24.1	8.0	281.1
위원회	행위자	68.7	15.6	2555.4	윤석열	행위자	23.1	9.3	285.9
공약	이념/가치	67.5	5.1	222.5	유린	이념/가치	19.9	5.6	374.2
국민	행위자	63.1	10.3	348.6	보장	법/제도	18.0	10.5	1023.5
교사	행위자	56.7	5.9	256.6	천부	이념/가치	11.2	5.0	370.7
변호사	행위자	54.9	7.8	320.6	안창호	행위자	10.7	6.2	533.4
구속	법/제도	54.0	7.5	238.0	말살	이념/가치	10.2	5.1	329.4
신장	이념/가치	49.9	4.9	291.0	권고	법/제도	10.1	7.8	764.3
상임	법/제도	48.3	4.9	230.1	보호	법/제도	7.3	8.9	656.7
위원	행위자	46.7	10.6	844.1	국가	행위자	6.2	17.4	2136.0
구제	법/제도	39.6	4.8	268.6	위원장	행위자	6.1	9.4	596.5
침해	법/제도	39.3	12.3	1723.0	단체	행위자	6.1	7.6	394.8
기관	행위자	35.7	8.9	503.5	기본	이념/가치	5.8	6.2	242.3
북한	행위자	35.5	10.8	710.3	좌파	행위자	4.9	9.2	447.9
결정	법/제도	35.2	9.4	499.8	헌법	법/제도	3.2	8.0	2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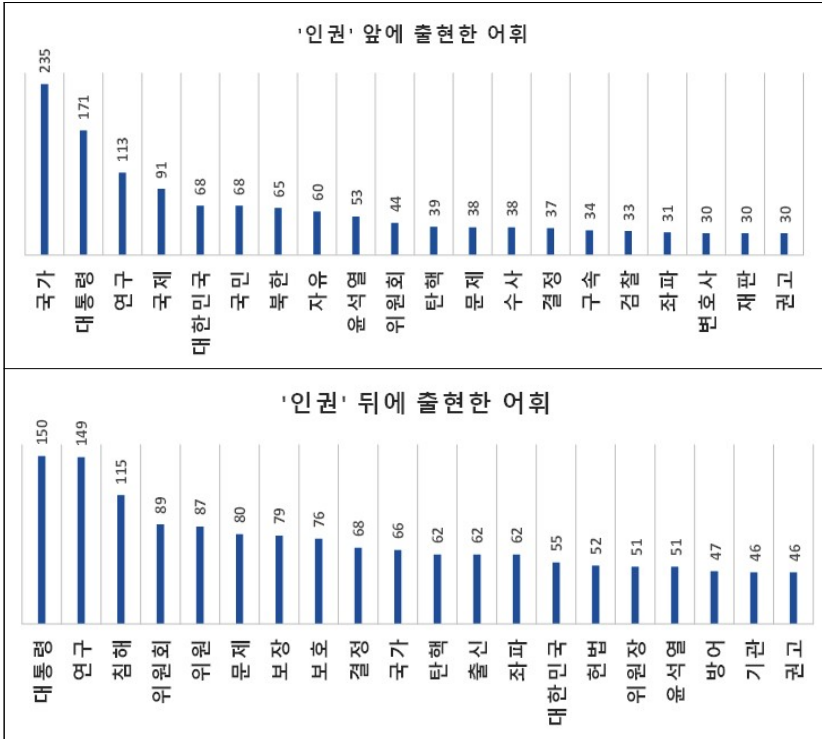
*주: PMI는 두 단어 간 연관성의 강도를 나타내며, 높은 값일수록 우연히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의미적 연관성을 의미한다. t-점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1.65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값이 클수록 연관성이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Log-likelihood는 두 단어의 공기 관계가 우연이 아닐 확률을 보여주며, 높을수록 강한 통계적 연관성을 의미한다.

먼저, 행위자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는 ‘위원회’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담론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위원’, ‘북한’, ‘대통령’, ‘위원장’, ‘국가’ 등이 높은 PMI 값을 보이며 인권과 강한 의미적 연관성을 가진 행위자로 언급된다. 또한 ‘우리’, ‘연구’, ‘국제’와 같은 키워드도 높은 PMI 값을 보이는

데, 이들 키워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와 같은 사법부와 연관된 행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극우 담론에서 인권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특정 제도나 국가 권력, 정치적 주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념/가치 그룹에서는 ‘탄압’이 높은 PMI(98.62)를 기록하며, 인권이 억압되고 제한되는 대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신장’, ‘유린’, ‘천부’, ‘말살’ 등이 인권과 함께 출현하며, 인권을 보편적 가치 또는 침해받는 권리로 보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법/제도 그룹에서는 ‘연구’(97.59)와 ‘방어’(97.46)가 가장 높은 PMI를 기록하며, 인권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에 의해 전용된다거나,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양상이 두드러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침해’, ‘보장’, ‘권고’ 등도 높은 의미적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권’ 전후의 단어 배치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인권’ 앞에는 ‘국가’(235회), ‘대통령’(171회), ‘연구’(113회), ‘국제’(91회), ‘대한민국’(68회), ‘국민’(68회), ‘북한’(65회), ‘자유’(60회)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인권’ 뒤에는 ‘대통령’(150회), ‘연구’(149회), ‘침해’(115회), ‘위원회’(89회), ‘위원’(87회), ‘문제’(80회), ‘보장’(79회), ‘보호’(76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 담론이 주로 국가적 맥락에서 논의되며, 인권의 침해와 보장,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시사한다. 요컨대, 인권과 관련된 극우 내에서 인권은 극우적 행위자에 대한 ‘억압-방어-제도화’라는 프레임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인권이 극우 세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극우 세력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극우 유튜브 콘텐츠에서 사용한 ‘인권’의 주변 단어



‘인권’과 마찬가지로,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차별’과 강한 공기 관계를 형성한 단어들을 PMI 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차별 담론은 성별, 제도, 정체성, 이념 등 다양한 범주의 공기어들과 결합되어 있으며, 특히 성별 및 법률 관련 단어들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 (<표 2> 참조).

<표 2> 극우 유튜브 콘텐츠 내 ‘차별’의 공기어 분석 결과(PMI 점수순)

단어	범주	PMI	t-점수	LL	단어	범주	PMI	t-점수	LL
성별	소수자	9.9	2.2	59.0	우리나라	사회/담론	5.0	2.7	40.5
혐오	사회/담론	9.7	2.2	57.5	이호림	사회/담론	4.4	2.0	80.2
차이나	집단/특성	9.4	2.0	44.6	자유	법률/제도	4.3	3.3	49.3
남성	집단/특성	8.8	3.3	113.5	대한민국	사회/담론	4.0	5.6	140.8
노동자	집단/특성	8.8	2.2	51.0	문제	사회/담론	4.0	3.1	41.5
금지	법률/제도	8.6	4.1	171.4	때문	사회/담론	3.9	4.1	69.9
주의자	사회/담론	8.5	3.3	108.4	금지법	법률/제도	3.8	8.2	1225.1
여성	집단/특성	8.2	4.2	170.2	불란서	사회/담론	3.4	1.7	51.8
노조	집단/특성	8.0	2.8	72.7	여러분	사회/담론	3.3	3.5	43.1
여자	집단/특성	7.6	2.6	60.4	이슬람	집단/특성	3.2	3.2	169.3
전라도	집단/특성	7.3	2.4	49.3	이제	사회/담론	3.2	4.2	59.1
인권	사회/담론	7.2	3.1	80.5	차별금지법	법률/제도	3.0	3.0	148.9
특정	집단/특성	7.2	2.4	48.0	동성애자	소수자	3.0	1.7	49.6
차별	법률/제도	6.8	3.3	82.0	인종	집단/특성	2.9	3.5	196.1
교회	사회/담론	6.7	2.6	51.4	성소수자	소수자	2.9	2.4	97.5
집단	집단/특성	6.5	2.6	49.4	차별주의자	사회/담론	2.5	2.0	62.8
정책	법률/제도	6.4	2.4	41.4	포괄	법률/제도	2.5	4.8	362.4
통과	법률/제도	6.4	2.4	41.3	동성애	소수자	2.4	4.0	249.9
반대	법률/제도	5.8	4.2	110.7	무지개	소수자	2.1	2.0	59.8
행동	사회/담론	5.8	2.6	42.5	퀴어	소수자	1.8	2.0	58.2
공격	사회/담론	5.8	2.6	42.4	젠더	소수자	1.4	2.2	70.1
세계	사회/담론	5.7	2.8	48.2	반드시	사회/담론	1.2	2.0	54.9
발언	사회/담론	5.6	2.9	52.8	동성	소수자	0.4	2.4	75.1
우과	사회/담론	5.6	3.1	58.1	주접	사회/담론	0.1	2.0	48.3
영상	사회/담론	5.3	2.8	43.9	주제가	사회/담론	0.0	2.0	48.0

*주: PMI는 두 단어 간 연관성의 강도를 나타내며, 높은 값일수록 우연히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의미적 연관성을 의미한다. t-점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1.65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값이 클수록 연관성이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Log-likelihood는 두 단어의 공기 관계가 우연이 아닐 확률을 보여주며, 높을수록 강한 통계적 연관성을 의미한다.

우선, ‘금지’(PMI=8.63)는 ‘차별’과 상대적으로 강한 공기관계를 보이며, 극우 담론에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성별’(PMI=9.90), ‘남성’(PMI=8.82), ‘여성’(PMI=8.17) 등도 높은 PMI를 기록하며, 젠더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현재 극우 담론 내에서 차별이 주로 성 정체성과 젠더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이념적 갈등 속에서 의미화되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차별금지법’은 PMI 수치 자체는 3.75로 다소 낮지만, 로그우도비 값이 1225.14로 매우 높아, 극우 담론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쟁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차별’, ‘반대’, ‘자유’ 등의 단어들도 함께 등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부감이나 법제화 저지의 논리가 함께 연계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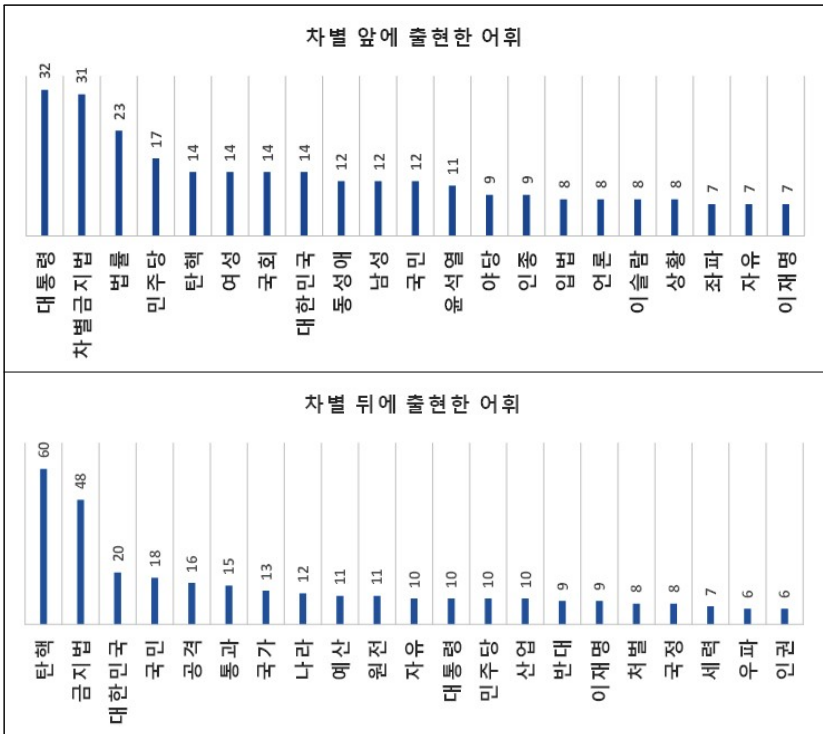
집단/특성과 관련된 단어들에서도 ‘차별’과의 공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슬람’, ‘인종’과 같은 단어들은 특정 인종이나 종교 집단이 극우 담론 내에서 차별 의제의 주요 쟁점임을 보여주며, ‘노동자’, ‘노조’ 등은 한국 우익 담론에서 적대적으로 다루어지던 노동자 조직 또한 차별 담론 속에서 유의미하게 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체성/소수자 그룹에서는 ‘동성애’, ‘성소수자’, ‘젠더’, ‘퀴어’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며, 이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의제가 극우 담론 속에서 차별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특히 ‘성별’의 PMI가 9.9로 데이터 내의 다른 키워드에 비하여 높다는 점은, 성 정체성 이슈가 차별 논의에서 가장 높은 의미적 응집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담론 영역에서는 ‘주의자’, ‘우파’, ‘인권’, ‘대한민국’ 등의 단어들이 ‘차별’과 연결되어 등장한다. 이들은 차별 담론이 단지 특정 법안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극우 담론의 전체적 세계관 및 정치적 자기 정당화의 틀 안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 전후의 단어 배치를 살펴보면, ‘차별’ 앞에는 ‘대통령’(32회), ‘차별금지법’(31회), ‘법률’(23회), ‘민주당’(17회), ‘탄핵’(14회), ‘여성’(14회), ‘국회’(14회), ‘대한민국’(14회)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차별’ 뒤에는 ‘탄핵’(60회), ‘금지법’(48회), ‘대한민국’(20회), ‘국민’(18회), ‘공격’(16회), ‘통과’(15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 담론이 주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특히 탄핵 이슈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극우 유튜브 콘텐츠에서 사용한 ‘차별’의 주변 단어



VI.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의 재구성

인권, 차별을 둘러싼 극우 유튜브 콘텐츠의 공기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치적 동원의 수사로 활용되며, ‘빈 기표’⁶⁾로서 발화하는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앞서 계량적으로 분석한 인권, 차별과 연관된 키워드들은 극우 콘텐츠 내에서 인권과 차별 모두 적대적 정치의 타자화를 위한 전략적 수사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특히 인권은 주로 제도적 맥락, 차별은 특정한 소수자의 혐오와 배제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아래에서는 대량의 데이터에서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극우 콘텐츠 내에서 인권, 차별을 포함한 실제 발화 분리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권, 차별이 타자 혐오와 배제의 기표와 등가 사슬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작동하는 질적으로 해석한다.

1. 빈 기표로서의 인권과 역전된 피해자성

‘인권’이라는 개념은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을 피해자로 위치시키는 담론적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뮐러(Müller, 2016)가 지적한 포퓰리즘의 핵심 전략인 ‘도덕적 독점’과 연결된다. 아래에 제시된 발화는 이러한 전략이 한국 정치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
- 6) 빈 기표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담론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특정한 내용을 갖지 않으면서도 담론적 질서 전체를 구조화하는 기표를 의미한다. 빈 기표는 헤게모니 투쟁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들을 등가연쇄로 연결하여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사회 질서’나 ‘사회 정의’와 같은 개념들은 구체적 내용이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이한 정치적 요구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이념의 결절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빈 기표의 작동은 사회운동에서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연대 구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여겨진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을 참조.

“인권 인권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인권입니까? 선택적 인권이죠.”

— “윤 어게인!! 뜨거운 현장”, <그라운드씨>, 2025.4.10. 기사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도저히 참을수...”

— “尹 대통령 불구속 재판 간다! 왜? [배승희 뉴스배송]”, <배승희 변호사>, 2025.2.4. 기사

위에서 인용한 “선택적 인권이죠.”라는 발화는 인권의 선택적 적용을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화자가 속한 집단이 인권 침해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브라운(Brown, 2008)이 논의한 ‘관용’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듯, 인권도 유사한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는 것”이라는 발화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피해자로 재구성하는 역전된 피해자성을 드러낸다.

“이게 저항의 본질입니다. 헌법의 조항이 있건 없건, 우리 인권, 천부인권, 하늘이 준 인간의 기본권이기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 “[LIVE] 아침 특별 생방송!! 싸움은 지금부터다!!”, <전광훈 TV>, 2025.1.27. 기사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와 인권과 평등과 법치와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 “2030을 대신하여 전한길 선생님의 호소”, <전한길뉴스>, 2025.3.27. 기사

이러한 ‘선택적 인권’은 제시된 자료에서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발화를 통해서 분명해진다. 다음 두 발화, “천부인권, 하늘이 준 인간의 기본권이기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

게나”,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와 인권과 평등과 법치”라는 발화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 적용 대상을 선택적으로 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서사로 활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극우 포퓰리즘의 인권 담론은 양가적 성격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적용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한정한다. 이는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한지를 암묵적으로 위계화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즉, 빈 기표로서의 인권 개념은 한국 정치 담론에서 극우적 맥락의 역전된 피해자성을 구성하는 핵심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인권 개념의 오용이나 왜곡을 넘어, 담론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타자의 권리 침해를 전제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재구성하는 ‘역전된 피해자성’의 서사는, 기존의 극우 행위자의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2. 적대성의 정치와 공포: 퇴행적 인권의 서사

극우 포퓰리즘 담론 내에서 ‘인권’은 역설적이지만,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퇴행적 논리로 전유되기도 한다. 무페(Mouffe, 2005)가 지적한 ‘적대적 정치’의 관점에서, 정치적 정체성은 ‘우리’와 ‘그들’의 구분을 통해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적 타자’로 호명된다. 라클라우와 무페(Laclau and Mouffe, 2001)의 담론 이론에 따르면, 타자를 구성하는 다양하거나 이질적인 요소들은 ‘등가의 사슬’을 통해 단일한 적대적 타자를 호명하기 위한 언어로 통합된다.

“이 차별금지법은 감히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재갈을 물린다는 겁니다. ……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거예요”
— “[LIVE] 윤 대통령 석방에 민주당 패닉카이스트도 시국선언 나선다”, <그라운드씨>, 2025.3.10.게시

“원래 젊은 애들이 차별금지법을 몰라요. 차별을 금지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죠. 그런데 인간의 성별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처벌을 받는 미친, 미친 법이라는 것을...”

— “(신혜식의 라이브뉴스) 최후의 결전 공수처 물리쳤다!”, <신의한수>, 2025.1.6. 게시

위에서 인용한 발화에서 ‘인권’은 특정 소수자 집단을 배제하는 서사적 장치로 작동한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관한 발언들은 이러한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인간의 성별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처벌을 받는 미친, 미친 법이라는 것을...”라는 발화는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나, 실질적으로는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반대하는 논리로 작동한다. 이는 브라운(Brown, 2008)이 지적한 ‘관용의 역설’과 유사한 맥락에서,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그 적용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적대적 타자를 설정하고, 인권을 퇴행적으로 적용하는 발화는 다양한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불란서 68 혁명의 주제가 되었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 “(신혜식의 현장 라이브뉴스) 광화문 역대급 천만혁명! 윤석열이 해냈다!”, <신의한수>, 2024.12.7. 게시

“교권이 무너진 건, 무너진 가장 큰 이유인 아동인권 조례를 도입한 좌파 조희연 교육감이 부당 채용으로……일어나십시오, 목소리를 내고 함께 교육을 바꿉시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역사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신혜식의 라이브뉴스) 애국세력 민노총 물리쳤다!”, <신의한수>, 2025.1.4. 게시

위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와 같은 발화는 성소수자와 종교적 소수자를 국가와 문명의 위기를 초래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이는 도덕적 공황의 전형적 사례로, 사회적 위기가 특정 집단에 투사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역사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는 발화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교사의 권리와 대립하는 논리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민족주의적 가치를 연결한다. 이러한 발화는 “우리 사회가 경험했었던 전쟁과 분단, 발전국가적 동원 과정에서 호명된 민족적 신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화교, 혼혈인을 차별(박경태, 2016: 58-59)”했듯, 극우 담론 내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극우 집단을 구성하는 외부의 존재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입김이 들어간 카카오톡에서는 여성 인권이라는 단어 조차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6개 여대 연합 충격 성명서”, <성창경TV>, 2025.3.24 게시

“내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김대중도 중국 놀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아 DJ, 왜냐면 신안이 육지가 아니에요. 아 섬이야 섬. 천 개의 섬이야. 중국하고 가깝지.”

— “차라리 줄줄이 다 탄핵 당하는 전략으로..”, <이봉규TV>, 2024.12.18 게시

이러한 인권의 선택적 적용에 근거한 적대적 타자의 설정은 이른바, 음모론과 결합하면서 반사실적 담화와 결합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위에서 나타나는 외국(중국, 북한)과 관련된 안보 담론은 음모론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이다. 특히 기존의 북한을 중심으로 냉전적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적 보수의 특성이었다면, 점차 그 대상이 중국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인권 담론 내

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2017년 사드(THAAD)배치 논란과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 거치며 급격하게 확장한 소위 ‘혐중’ 정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윤영도, 2025). 상기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중국 입김이 들어간 카카오톡에서는 ‘여성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금지”와 같은 발언은 중국이나 북한을 인권과 자유를 위협하는 적대적 타자로 구성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김대중도 중국놈 일수도 있어요”라는 발화는 음모론과 지역감정을 결합하며 정치적 적대성의 경계를 형성하면서 외부의 위협을 연결시키는 수사적 전략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극우 포퓰리즘 담론에서 나타나는 인권과 차별에 대한 퇴행적 서사에서는 ‘등가사슬’이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다. 다양한 이질적이면서 적대적으로 규정된 타자들(이들의 용어를 따르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북한, 중국, 좌파, 학생인권 등)이 단일한 적대적 타자로 통합되며, 이들은 모두 이른바 ‘우리’로 호명되는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 ‘교권’ 등을 위협하는 존재로 구성된다. 이 등가사슬을 통해 인권의 언어(인권, 차별 등)는 역설적으로 배제와 적대성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언어로 전유된다. 정치적 반대자, 외국과 관련된 안보 위협, 소수자, 지역감정 등 다양한 이슈들은 등가사슬을 통해 단일한 적대적 타자로 통합되며, 이들은 ‘대한민국’과 같은 ‘우리’의 위기를 초래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이는 정치적 차이를 도덕적 적대관계로 재구성하는 적대적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적 정치의 다원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적대성의 정치는 공포와 공황을 촉발하는 레토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앞선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에서 나타나듯 특정 집단이나 이슈를 사회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포를 생산하는 전략이 두드러진다.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교권이 무너진 건” 등의 표현은 임박한 위기를 강조하며,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적대적 외집단인 소수자나 정치적 반대자를 지목한다. 이는 공포의 생산을 통해 특정한 주체성

과 권력관계가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일어나십시오” 등과 같은 발화는 청중을 ‘우리’의 일원으로 호명하며, 적대적 타자에 대한 배제와 처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 제도적 불신의 담화: 인권 관련 제도와 행위자에 대한 적대성

마지막으로, 이번 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고유하게 드러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법부에 대한 제도적 신뢰 훼손의 레토릭 또한 관찰된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 대한 발화는 사법 제도와 유관 행위자를 특정 정파성(‘좌익’, ‘좌파’)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해당 인권 관련 제도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담론 전략은 음모론과 결합하며 민주주의적 제도들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서사를 보여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자,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자, 색깔이 짙아 펼쳐지죠.”

— “청년 폭발, 탄핵반대 50%대 돌파. 대혼란에 빠진 민주당 ‘카톡 검열’ SOS, 左 정계선 재판관 배제, 현재 긴급회의 [굿모닝 대한민국]”, <펜앤마이크TV>, 2025.1.14 게시

“지금 우리법 연구회와 인권법 연구회는 명백한 좌익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이런...”

—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전 8시 생방송]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정국 끝내야”, <고성국TV>, 2025.2.21 게시

“김명수를 비롯한 이 좌익 세력들,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인권 연구회 시작해서 편향적으로, 이념적으로 아주 편향된 이 판사들이...”

— “민주당 이게 범죄라니? 구치소에서 무슨 일? [배승희 뉴스 배송]”, <배승희변호사>, 2025.2.6. 게시

위 발화에서 나타나듯, 영상에서는 범조인들의 학술적, 전문적 활동을 정파적으로 규정하고 이념화함에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색깔이 짙 펼쳐지죠”라는 표현은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인물의 사법적 판단을 선입견에 기반해 단정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전문성이나 법리적 판단보다 소속 단체의 이념적 성향을 우선시하는 환원주의적 논리를 보여준다. 또한, “명백한 좌익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음모론적 서사구조를 동원하여 사법부와 같은 제도적 행위자를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권력 집단으로 프레임한다. 이러한 담론은 민주적 제도의 핵심인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인권과 이념을 결합하며 제도적 신뢰성을 위협하는 담론 전략은 복잡한 법리적, 제도적 문제를 단순한 이념 대립 구도로 환원시키는 포폴리즘적 서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명백한 좌익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음모론적 서사는 사법부를 포함한 인권 레짐을 구성하는 제도적 행위자들을 ‘부패한 권력 집단’으로 프레임하는 전형적인 포폴리즘적 발화에 해당한다.

VII. 나가는 글

이 글은 한국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인권’과 ‘차별’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어떻게 적대적 정치의 도구로 전유되는지 분석하였다. 극우 유튜브 콘텐츠에서 극우 포폴리즘이 재구성한 인권은 이들이 규정한 여러 적대적 타자를 극우적 접합 논리로 결합한 일종의 연속체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극우 담론에서 인권을 극우적 가치와 연결된 여러 이질적 의미와 접합하는 방식의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권과 역전된 피해자성’의 구성이다. ‘선택적 인권’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이 전략은 권력자를 인권 침해의 피해자로 위치시키면서, 실제 소수자들의 인권은 부정하거나 무시한다. 이는 극우 행위자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담론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적대성의 정치와 공포’를 통한 퇴행적 인권 서사의 형성이다. 성소수자, 이슬람, 북한, 중국 등 이질적 집단들이 ‘등가사슬’을 통해 단일한 적대적 타자로 통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프레임되며,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와 같은 표현은 압박한 위기를 강조하여 공포를 생산한다. 이는 정치적 차이를 존재론적 적대관계로 재구성함으로써 민주적 경합의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적대성의 정치는 공포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촉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인권의 퇴행적 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은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와 같은 내집단이 지켜야 할 가치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프레임한다. 넷째, 헌법재판소 등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들을 ‘좌파’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한국의 극우 포퓰리즘에 의한 ‘인권’ 담론의 전유 방식을 대규모 유튜브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인권 담론이 경험하는 퇴행의 구체적 양상을 드러내고, 민주주의적 공론장의 위기를 진단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분석한 극우 포퓰리즘 담론 내에서 다루어지는 인권의 서사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 담론이 단순한 의미의 변화를 넘어 근본적인 퇴행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권과 차별이라는 기표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 아닌 적대적 타자의 구성과 배제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현상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빈 기표로서 인권을 전유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젠더, 성소수자, 외국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은 사법부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공격하는 담론과 달리, 이번 계엄 이후 탄핵 국면만이 아니라, 한국의 극우 담론 내에서 지속하여 생산되고 장기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담론적 의제가 될 가능성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인권을 퇴행적으로 전유한 극우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극우 포퓰리즘

의 인권 담론 전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1단계로는 인권에 대한 정서적 프레임을 재구성하기 위해 극우 포퓰리즘이 활용하는 두려움과 분노의 정동을 희망과 연대의 정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적 서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단계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포괄적 인권 보장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보장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치적 편향에 의한 인권 개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단계로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극단적 콘텐츠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층적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담론의 시간적 변화와 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한 자료는 계엄 직후부터 탄핵 선고 사이 약 4개월의 짧은 기간만을 다루고 있다. 극우 담론 내에서 인권이 다른 사회적 쟁점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와 특정 국면에 출현하는 주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장기적 분석은 필수적이다. 둘째, 다른 정파성을 다룬 콘텐츠 및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극우 담론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규명할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한국적 극우 담론의 속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극우 콘텐츠와 다른 정파성을 가진 콘텐츠에서 인권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차 자료를 활용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극우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요청된다.

참고문헌

- 장인철. 2020. “한국 개신교와 보수적 시민운동 : 개신교 우파의 극우·혐오 정치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3: 3-30.
- 김왕배. 2017. “언어, 감정, 집합행동.” 『문화와 사회』 25: 7-59.
- 김진호. 2016. “한국 사회와 개신교 극우주의 1: 서론.” 『제3시대』 85: 6-14.
- 박경태. 2016. “한국사회와 난민.” 『문화과학』 88: 47-65.
- 서현수. 2024. “핀란드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에 관한 연구: 핀란드인당 (Finns Party)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42(2): 111-138.
- 송지우. 2022. “인권, 평등, 차별: 이론적 조감.” 『인권연구』 5(2): 1-25.
- 오창룡. 2023. “덴마크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분화: 인민당의 쇠퇴와 신생 극우정당의 부상.” 『유럽연구』 41(4): 19-43.
- 윤영도. 2025. “협종의 조건과 정동 역학 — 포스트 세계화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110: 153-191.
- 이재연·한남기. 2022. “논문 제목과 주제어의 공기어 네트워크로 본 『상허학보』의 30년.” 『상허학보』 66: 11-56.
- 이해미. 2025. “일본 3대 일간지의 한국 계엄령·탄핵 보도 담론 분석 -아사히·마이니치·요미우리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1(104): 173-193.
- 장석준. 2024. “포퓰리즘 시대에 극우파에 맞서는 법: 인권 담론·정책은 왜 폐지당하고 있는가.” 『오늘의 교육』 81: 32-40.
- 전의령. 2017. “인터넷 반다문화 담론의 우익 포퓰리즘과 배제의 정치.” 『경제와 사회』 116: 396-423.
- 정병기. 2020. “포퓰리즘의 개념과 유형 및 역사적 변화 : 고전 포퓰리즘에서 포스트포퓰리즘까지.” 『한국정치학회보』 54(1): 91-110.
- 조효제. 2018. “인권 실현의 통합적 접근.” 『인권연구』 1(1): 37-71.
- 주미영. 2021. “정치불신과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3): 153-188.
- 최유숙. 2017. “신문 코퍼스를 활용한 ‘다문화’ 공기어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24: 275-301.
- 홍성수. 2019. “혐오(hat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 『법학연구』 30(2): 191-228.

- 황인정. 2024. “누가 한국의 극우인가? 한국 극우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정치정보연구』 27(2): 127-162.
- Aggrawal, Niyati, Anuja Arora, Adarsh Anand, and Mohammed Shahid Irshad. 2018. “View-count Based Modeling for YouTube Videos and Weighted Criteria-Based Ranking.” In: Mangey Ram, J. Paulo Davim (Eds). *Advanced Mathematical Techniques in Engineering Sciences*. Boca Raton, FL: CRC Press.
- Alston, Philip. 201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A/HRC/29/31*, ¶ 54.
- Alston, Philip. 2017. “The Populist Challenge to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9(1): 1-15.
- Bartsch, Sabine, and Stefan Evert. 2014. “Towards a Firthian Notion of Collocation.” *Vernetzungsstrategien Zugriffsstrukturen und automatisch ermittelte Angaben in Internetwörterbüchern* 2(1): 48-61.
- Blokker, Paul. 2023. “Using Liberal-Legal Tools for Illiberal Gain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Legal Mobilisation by Conservative Right-Wing 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in Context* 20(3): 401-408.
- Brodersen, Anders, Salvatore Scellato, and Mirjam Wattenhofer. 2012. “YouTube Around the World: Geographic Popularity of Videos.” In: *Proceedings of the 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241-250.
- Brown, Megan A., James Bisbee, Angela Lai, Richard Bonneau, Jonathan Nagler, and Joshua A. Tucker. 2022. “Echo Chambers, Rabbit Holes, and Algorithmic Bias: How YouTube Recommends Content to Real Users.” *SSRN* 4114905.
- Brown, Wendy. 2008.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urch, Kenneth W. and Patrick Hanks. 1990. “Word Association Norms, Mutual Information, and Lexicography.” *Computational Linguistics* 16(1): 22-29.
- Damani, Om P. 2013. “Improving Pointwise Mutual Information (PMI) by

- Incorporating Significant Co-Occurrence.” *arXiv preprint* arXiv: 1307.0596.
- Dancy, Geoff, and Christopher J. Fariss. 2017. “Rescuing Human Rights Law from International Legalism and Its Critics.” *Human Rights Quarterly* 39(1): 1-36.
- Hamilton, Claire. 2023. “Speaking Rights to Populism? Using Emotion as the Language of Values.”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15(3): 692-701.
- Kaiser, Jonas, and Adrian Rauchfleisch. 2020. “Birds of a Feather Get Recommended Together: Algorithmic Homophily in YouTube’s Channel Recommend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Social Media + Society* 6(4): 2056305120969914.
- Kenny, Paul D. 2020. “The Enemy of the People: Populists and Press Freedom.”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3(2): 261-275.
- Kim, Seongcheol. 2023. “Far-Right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Findings from France and Italy.” *Political Studies Review* 21(1): 183-189.
- Kocemba, Karolina, and Michał Stambulski. 2023. “Populism and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The Case of Poland.” In: Rafal Manko, Adam Sulikowski, Przemyslaw Tacik, and Cosmin Cercel (Eds). *Law, Populism, and the Political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ondon: Birkbeck Law Press.
- Krpec, Oldřich, and Carol Wise. 2023. “Nationalism and Conservative Populism in the CEE Bloc: A Political Economy and Historical Institutional Approach.” In: Alison Brysk (Ed.). *Populism and Human Rights in a Turbulent Era*.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 2001.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Second Edition. London: Verso.
- Laclau, Ernesto. 2005. “Populism: What’s in a Name?” In: Francisco Panizza (Ed.).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London: Verso.

- Laclau, Ernesto. 2005. *On Populist Reason*. London: Verso.
- Mouffe, Chantal. 2005. *On the Political*. London: Routledge.
-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7.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dde, Cas. 2004. "The Populist Zeitgeist." *Government and Opposition* 39(4): 541-563.
- Mudde, Cas. 2007.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Europ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üller, Jan-Werner. 2016. *What Is Populism?*.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Nayyeri, Mohammad. 2025. "Populism, Backlash Morality and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in Context* 21(1): 58-79.
- Neuman, Gerald L. 2020. "Populist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In: Gerald L. Neuman (Ed.). *Human Rights in a Time of Populism: Challenges and Respon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Callaghan, Derek, Derek Greene, Maura Conway, Joe Carthy, and Pádraig Cunningham. 2012. "An Analysis of Interactions Within and Between Extreme Right Communities in Social Media." In: Martin Atzmueller, Alvin Chin, Denis Helic and Andreas Hotho (Eds). *Ubiquitous Social Media Analysis. MUSE MSM 2012 2012.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8329. Berlin, Heidelberg: Springer.
- Panizza, Francisco. 2005.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In: Francisco Panizza (Ed).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London: Verso.
- Roth, Kenneth. 2017. "The Pushback Against the Populist Challenge." In: Human Rights Watch (Ed).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18*. New York, NY: Human Rights Watch.
- Sun, Mingfei, Xiaoyue Ma, and Yudi Huo. 2022. "Does Social Media Users' Interaction Influence the Formation of Echo Chambers?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Vaccine Video Comments on YouTub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3): 15869.

Sunstein, Cass R. 2017.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Tuori, Kaius, and Iida Karjalainen. 2025. “The European Far Right and Human Rights Languag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9(1): 1-21.

<Abstract>

**FAR-RIGHT POPULISM AND HUMAN RIGHTS IN KOREA
: FAR-RIGHT YOUTUBE CHANNELS AND REGRESSIVE
HUMAN RIGHTS DISCOURSE POST-DECEMBER 3RD
MARTIAL LAW***

Kim, Jongwoo**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strategically articulated within far-right discourse on Korean YouTube channels. Drawing on a collocation analysis of 4,119 videos from 11 far-right channels uploaded between December 3, 2024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April 4, 2025 (the impeachment verdict) and informed by Laclau and Mouffe's discourse theory, this study identifies three core mechanisms through which far-right populism appropriates human rights discourse. First, a discourse of 'selective human rights' is constructed by portraying political elites as victims through narratives of 'inverted victimhood' while marginalizing the rights of minorities. Second, under a politics of antagonism, heterogeneous groups—including sexual minorities, Muslims, and North Korea—are linked through 'chains of equivalence' to form a unified 'empty signifier.' Third, a discourse of 'institutional delegitimation' undermines trust in human rights institutions by framing entities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s components of a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 (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 Research Professor, Sociology, Yonsei University

leftist cartel. These regressive discursive strategies instrumentalize the language of universal human rights to serve exclusionary political ends, transforming democratic disagreement into an existential conflic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growing literature on the far-right's articulation of human rights.

Keywords: Far-right Populism, Human rights, YouTube, Martial law, Regressive human rights discourse